

새만금 국제공항 정부 예타면제 의미·효과는?

도민들, '항공오지' 설움 벗다... 전북도 추진 사업과 시너지

사업 본격 추진 50년 숙원사업 해소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확정으로 앞으로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북이 항공오지 설움을 벗게 되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정부가 29일 발표한 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에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한 예타당성 조사가 면제돼 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공항이 없는 전북에도 이제 국제공항을 건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50년 숙원사업의 해소다.

2000년 전복도인 열람과 총의가 모아진 결과이며, 새만금 명품도시 조기개발 견인, 일자리와 엄청난 부가가치 창출 효과는 물론 농생명식물산업과 금융산업 등 전라북도 주력 핵심산업과 미래형 산업과도 연계되는 유무형의 많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전북권 공항은 1968년 2월 전주시 송천동에 전주비행장이 준공돼 서울-전주-제주간 노선 민간여객기가 운항을 시작했으나 호남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승객이 감소해 1974년 군용 공항으로 전용됐다.

이후 전북권 공항건설은 김제공항 건설(1990. 12~2006. 11), 군산공항 확장 및 국제선 취항(2008. 9~2013. 4),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추진(2014. 11~현재) 등 크게 시기별 3 단계로 나눌 수 있다.

1990년 12월 당시 건설교통부는 김제공항 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을 거쳐 1998년 9월 공항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에 반영하면서 김제공항 건설이 본격화 됐다.

건교부는 이어 김제공항개발 기본계획 고시를 한 뒤 1,474억원을 들여 김제 백산면과

공덕면 일대에 길이 1,800m, 너비 45m의 활주로 1개와 보잉 737급 여객기 3대가 이용할 수 있는 계류장을 갖춘 공항을 2007년까지 완공한다는 목표로 공사업체 선정과 용지 매입까지 마쳤지만 '환경을 파괴한다'는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혔고, 감사원이 중단을 요구하면서 2004년 전면 백지화됐다.

전북권 공항에 대한 도민 염원은 2008년 당시 정부가 '광역경제권 30개 선도프로젝트'로 이를 선정하고 2011년 1월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면서 다시 싹틔기 시작했다.

군산공항에 국제선을 취항시키려는 전북도는 미군과의 SOFA 과제로 채택하고 실무협의 회의를 거쳤으나 군사작전과 안보 등의 이유로 국제선 취항이 불가하다는 의견에 따라 1992년 12월부터 군산공항에 군산~김포, 제주 노선이 취항하고 지금까지도 군산~제주 노선을 운항하고 있는 군산공항은 국제선이 취항할 수 없는 반쪽짜리 공항에 머무르고 있다.

전북도의 전북권 공항 건설은 2014년 민선6기 송하진 도지사가 취임하면서 실무적으로 다시 본격화 됐다.

도는 새만금지구 한중 경협단지, 국가식품 클러스터 조성, 국내외 기업유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이전, 무주 태권도원 개원 등 항공수요에 대비한 새만금 거점 국제공항건설이 절실하다는 분석 아래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그러면서 2014년 11월부터 곧바로 전북권 항공수요 조사용역을 추진해 새만금 국제공항 필요성과 당위성 확보에 들어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16년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에 새만금 신공항 건설을 포함했고 2017년 항공수요 조사가 이뤄져 2025년 67만명, 2055년 133만명의 항공 수요가 예측된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을 지역공약사업과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하면서 전북권 공항 건설 여건이 더욱 성숙되는 계기를 맞게 됐다.

동북아 경제 중심

명품도시 조성 도약 발판

대규모 일자리 창출 등

생산·부가가치 유발 효과 커

공항·항만·철도 등

물류체계 완성 우위 선점

도는 지난해 11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접수한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1순위로 신청한 뒤 도의회를 비롯해 도내 상공회의소, 애항운동본부, 재경전북도민회, 경제인 단체 등 도민 총의를 모아 예타면제 건의활동을 벌여 공항건설이 국제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냈다.

전북도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역량을 집중한 것은 새만금의 최종 목표인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도약을 이루려면 동북아와 신속하고 편리하게 연결될 수 있는 항로(航路)가 반드시 열려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공항 건설을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 투자유치 촉진으로 생산·부가가치 효과 유발과 대규모 일자리 창출, 2023 세계캠버리 대학의 성공적 개최, 새만금사업의 성공, 농생명산업, 연기금을 특화한 금융중심 도시로의 성장, 대한민국 여행 체험1번지 육성에 따른 관광객 유치 등 전북도의 핵심과제 성과 도출과 함께 국가균형발전 선도 등 다양한 기대효과를 현실화하기 위함이었다.

전북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공항 건설기간 동안 생산·부가가치 유발 및 고용 창출 효과를 볼 때 전국적으로 약 2조7,046억원의 생산·부가가치 유발과, 1만2,374명의 고용을 촉발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지역에서만도 약 1조5,433억원의 생산·부가가치 유발, 8,483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발생하고 공항 완료 후에도 종사자 및 투자유치 등으로 인한 일자리와 생산·부가가치 효과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도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로 이른바 '트라이포트'(Tri-Port, 공항,항만,철도) 물류체계 완성과 동북아 물류중심지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새만금의 경우 토지 보상비, 지장물 보상비가 필요 없고, 새만금 동서남북도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이미 활발히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공항건설에 따른 별도의 접근 교통망 개설을 위한 비용부담이 적어 경제공항 건설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공항건설로 새만금지역에 적기 투자유치를 촉진, 개발사업 선순환 구조를 정착해 새만금사업 성공을 견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새만금지역 또는 인근에 국제선이 취항할 수 있는 규모와 시설을 갖춘 국제공항을 건설할 계획이며 현재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18. 7월~19년 6월) 사전타당성용역을 통해 공항의 위치, 시설의 규모, 사업비, 사업기간 등이 구체화될 계획이다.

사전타당성용역을 통해 공항의 위치, 시설의 규모,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구체화하고 기본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거쳐 착공을 하게 된다.

새만금 지역은 전체가 국유지로 보상이 필요 없고 환경과 논란 등 사회적 갈등 요소가 없는 공항의 최적지로 착공과 동시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는 이에 따라 정상적인 공항 건설 절차가 진행될 경우 8~9년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과 기본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기간을 단축해 5만여명이 참가하는 대형 국제행사인 2023년 세계캠버리대학 개최 전 최소한의 공항 사용이라도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방침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정부가 전북도민들의 오랜 염원을 의면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명품 새만금 조성을 위한 발걸음이 더욱 빨라지고 새만금의 브랜드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제공항 건설 예타도 면제된 만큼 관련부처 등과 함께 새만금사업 조기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공항 건설 역시 속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도민 대상

도민안전보험 가입 추진

전북도는 재난 및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도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도민의 안전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전 도민을 대상으로 도민안전보험 가입 추진을 논의하는 도·시·군 회의를 29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민안전보험 추진방법, 보장항목, 보장금액 등에 대해 논의했고, 시·군별 특성에 맞게 추가되어야 하는 항목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도민안전보험은 도와 시·군이 함께 비용을 부담하여 시·군에서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사가 각종 자연재해·재난·사고 등 피해를 본 도민에게 보험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게 된다.

보장항목은 모든 시·군이 공통적으로 ▲자연재해 사망·후유장애(일사병?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애, ▲강도 상해사망·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등 8개 항목에 대해 적용하고, 시·군별로 항목을 추가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더불어 보장금액은 항목별로 최대 1천만원을 지급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김진성 기자

마을 결산총회에 주류

제공 조합장 고발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마을 결산총회를 방문하여 주류 등을 제공하고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 4씨를 29일 전주 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순창군선거관에 따르면 조합장 A씨는 2018년 말경 마을별로 결산총회가 개최된 장소 2곳을 방문하여 12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하면서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김진성 기자



“떡국이 왔어요” 전북도 자원봉사 센터가 주최한 2019년 어르신 떡국 나눔 행사가 29일 전주시 오펜리스 웨딩홀에서 실시된 가운데 자원봉사자들이 어르신들에게 대접할 떡국을 나르고 있다.

연말까지 규제샌드박스 사례 100건 이상 창출

정부, '2019 규제 정비 종합계획' 국무회의서 확정

정부는 29일 기업이 신산업분야에서 자유롭게 상품·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규제를 면제해주는 '규제샌드박스' 사례를 연말까지 100건 이상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19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규제정책은 ▲규제혁신 패러다임 전환 ▲혁신성장 뒷받침 및 민생부담 완화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라는 방향성 아래 추진된다.

정부는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혁신 성과창출이 시급하다고 보고, 법정시한보다 한 달 앞당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범정부 차원의 규제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포괄적 네거티브(우선 허용, 사후 규제) 방식의 규제체계 및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확대·확산한다.

특히 규제 개선 건의에 대해 각 부처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신산업규제혁신 TF 등에서 운영 중인 방식으로, 정부는 이를 확대 시행한다.

각 부처에서는 또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정 '기준규제 정비위원회'를 설치해 유지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은 규제에 대해 개선을 추진하고, 국무조정실이 개선 추진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정부는 신산업 규제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핀테크, 스마트시티 등 혁신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이 가능한 과제를 발굴하고 1분기 안에 발표한다. /뉴시스

또 기업·현장 릴레이설명회, 전담 컨설팅 기관 지정 등을 추진해 올해 안에 100건 이상의 규제샌드박스 사례를 창출할 계획이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규제샌드박스 관계기관 협의회를 운영해 사례 발굴 현황을 점검한다.

올해는 IoT(사물인터넷), 3D 프린팅, 스마트에너지, 바이오 신약 등에 대해 규제혁파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자동차, 조선 등 기존 주력산업의 투자 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업·진입·인자·영업규제를 지속적으로 없애는 한편, 경제단체, 기업, 지자체와 정기적인 간담회 등 소통할 계획이다.

이어, 정부는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사전 컨설팅 감사를 활성화하고, 모범사례를 발굴·전파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도소방본부, 설 연휴 특별경계근무 태세 돌입

전북도소방본부가 모든 도민과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2월 2일부터 7일에 걸쳐 6일 동안 특별경계근무 태세에 돌입한다.

이번 특별경계근무 기간 중에는 인력 1만604명(소방공무원 2,275, 의무소방원 109, 의용소방대 8,220)과 장비 417대(소방헬기 1, 소방정 1, 펌프차 및 물탱크차 137, 구조·구급차 116, 기타 소방관들은 즉시 출동 가능하도록 24

시간 비상대기 태세에 임하고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역, 터미널,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는 소방차 현장배치로 유사시 즉각 대응하도록 한다.

또한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대상에 대한 소방 순찰을 받아 재난 취약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24시간 화재예방 감시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특히 설 연휴에 특화된 119생활민원 및 소방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전주교대, 도교육청 연계 지역 혁신교육과정 연구 수주

전주교육대학교(총장 김우영)가 전북 교육청과 연계해 초등학교원 양성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애쓰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도교육청은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운영 체제 정착지원과 혁신 정책연구 수행을 통한 교·사대 교육과정 전환 및 예비교사 성장을 목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1년간 총사업비로 150,000천원의 예산을 수립할 예정이며, 이를 지역 교육전문기관(교·사대)에 의뢰하여 연구용역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주교육대학교는 부설초등학교(혁신학교 포함) 교원과 연계해, 현장 교

원의 교사교육과정에 대한 이론적 검증 및 적용 사항을 검토하는 등 참학력 기반 혁신교육과정의 탄탄한 토대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우영 총장은 "부설초와 연계할 수 있는 교육대학교의 특수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교·사대의 교육과정 전환을 통한 현장과 연계된 예비교사 성장을 위한 혁신정책 활성화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교육대학교는 전북도교육청-전주교육대학교 협업체체 구축 협약서 제3조(공동연구 및 학술회의 개최와 참석)에 근거해 '전북 혁신미래학교 모델 개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정은성 기자

전북도의회, 중국 강소성 노동단체 방문단 간담회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장은 29일 의정실에서 중국 강소성 총공회(노동단체) '쉬용(徐勇) 부주석등 방문단' 일행 및 한국노총 전북본부 안재성 의장등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양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힘쓰자고 요청했다.

송성환 의장은 이날 "전북도와 강소성, 전북도의회와 강소성인민회의가 형제처럼 교류하는 것처럼 양 노동단체도 함께 간담회를 갖고 우호협력력을 강화해 양 지역의 경제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드린다"면서 "전북도의회는 양 노동단체의 교류 활성화로 양 지역의 경제발전을 달성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강소성 총공회 쉬용 부주석은 "강소성 총공회와 한국노총 전북본부는 매년 상호 도시방문 등 교류행사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으며 우호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호 방문을 통해 선진 노사 문화를 배우는 것은 물론 양 지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중국 강소성 총공회는 1997년 한국노총 전북본부와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 뒤 22년째 노동문화 교류와 양 지역의 기관을 방문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